

그들은 그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독일지역 민주화운동 사료

이광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개방화와 더불어 '민주화이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등장하였으며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적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대통령 산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공익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 조직들이 국가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 성과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요구와 투쟁의 결과물이다. 특히 지식과 남편 등을 민



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벌인 천막농성과 투쟁은 그것을 추동한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런 조직들의 존재 자체가 민주화의 진전을 확인시켜주는 징표는 아니다. 선거행위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좀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 민주화의 정도는 미흡하고 저

열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90:10 사회',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현실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의사는 선거 이외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와 수단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은 견고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만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개적 독재체제 시기와 비교하여 지금 살만하다고 한다면, 이미 그러한 발상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대칭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은 사회 곳곳에서 재생산되고 있고 바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 그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문제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끝없는 운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살만한데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그들은 한국사회보다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곳에 살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그 경로와 내용은 다르지만, 냉전시기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에 거주하며 활동했던 분들은 더욱 그렇다. 이들은 공개적 독재체제 시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타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그 중 몇몇 분들은 과거의 활동으로 인해 조국을 자유로이 왕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불온한 행동'을 했기에 이 지구촌시대에 여전히 자신들의 조국을 맘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까. 주로 항학열에 불타 60년대 독일로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 광부들, 간호사들이었던 이들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조작, 증폭된 동백림사건에 연루되거나, 유신체제가 등



장한 후 이를 비판하며 만들어진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하 민건), 재독한인노동자연합(이하 노련), 유럽민족민주연합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 전력 등을 가진 분들이다. 물론 이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족쇄는 공안당국이 규정한 '친북활동'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을 왕래하였다는 점, 혹은 범민련 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냉전분단체제가 낳은 정치적 희생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주화된 조국'에 의해 '고향 떠난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하고 있다.

고향 떠난 천덕꾸러기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 한 것은 이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객관적인 귀적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에 관한 객관적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독일에서 24년째 개최되고 있는 유럽오월민중제에 참여하여 사료수집설명회를 갖고 독일 및 유럽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로 합의하



였다. 사료수집대상에는 문서류, 각종 시청각자료, 행사용품 등 물건류, 박물관 등이 포함된다.

이미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74년 독일 및 유럽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건 현장 등이 인상적이다. 이 현장의 전문은 민건 활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독재정치의 횡포와 탄압, 국민경제의 예측과 파탄, 서민대중의 착취와 빈곤을 초래한 박정권의 비민주적, 반사회적인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질서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1974년…… 재독 한인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 지성인들이 발기하여 조직한 협의단체이다.”

이것은 민건에 대한 공안당국의 사시(斜視)와 달리 이들의 활동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집된 자료에는 민건이 발족하게 된 계기인 74년 본 뮌스터 광장집회를 알리는 민주건설협의회발기추진인 일동 명의의 ‘박독재 타도하고 민주사회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사형선고를 받은 시인 김지하 구명활동 관련 자료,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지,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활동 과정에서 산출된 사료, 민청학련

관련자 구명 활동 관련 자료 그리고 미국 민주화운동세력과의 연대활동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건 창립 다음 해에 만들어진 재독한인노동자연합 활동 관련 자료들도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벌인 민주화운동 및 현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70년대 한국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지지 및 지원활동 관련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독일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재독한인여성모임 창립대회 및 활동 관련 자료, 그리고 각종 행사 팸플릿, 사진 등도 귀중한 자료이다. 다른 한편 정보당국이 행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활동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눈에 띈다.

독일 및 유럽지역 사료 수집 함의

이미 수집된 자료에 더하여 지금 본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독일 및 유럽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단체들의 활동을 담은 각종 사료는 독일, 유럽 등을 포함, 해외에 거주한 동포들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 의의를 온전히 밝히기 위한 연구 활동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애초 먼 타국에 나가 광산노동자로, 간호사로 일하며 이른바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이들이 왜 그 삶의 현장을 넘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그 험난한 활동에 스스로 몸을 던져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들이 아직도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다. 이들의 고통은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한국사회에서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과 그 관계의 구현을 고민하는 모든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침을 자기문제화하며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자료관(Archives) 및 기념관 건립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